

정부기관 기업돕기 적극 앞장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위시한 정부기관도 인터넷기업 돕기에 나섰다. 산자부는 2001년 4월에 발효될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디지털 콘텐츠나 솔루션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무역금융, 외국환거래, 벤처지정, 수출마케팅 지원, 병역특례 등 기존의 물품수출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현재의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은 물품의 수출·수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수입하는 것도 무역으로 보도록 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 제품은 물론 사이버무역과 솔루션 부분도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국내 시장의 침체로 인터넷기업들이 앞다퉈 기술이나 콘텐츠 솔루션 등의 수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들의 직접적인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최근 침체된 인터넷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통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집행예정인 1,500억원 정보통신 투자 가운데 인터넷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기로 했으며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추진중인 인터넷기업경영지원센터의 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내놓은 '인터넷기업 경영지원센터 운영안'은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초기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요소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센터내에 비상설기구로 조직화 한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 존속 가능성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체수계 관련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등 55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이 법에 근거해 단체수계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단체수계 물품수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완화시켜 단체수계 시장을 사실상 확대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한 조항을 '정부가 출자한 경우'로 고쳐 정부출자 정도에 관계없도록 완화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민 의원측은 "단체수계 제도는 정책적 효율성이 많다"며 "이 제도의 효율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 국내 산업의 효율적인 성장구조 정착은 물론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수계 물품수를 '98년 지정 물품수를 기준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줄이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는 단체수계의 물품배정을 둘러싼 운영상 문제점과 카르텔 시비 등을 이유로 단체수계를 단계적으로 축소, 2002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1천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인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단체수계 제도의 공정하운영을 다짐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전력선통신망 한국표준화포럼 창립

전력선통신망 사업에 대한 국내 창구 일원화와 국제표준화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구성됐다.

기인텔레콤 플레넷 피엘콤 등 전력선통신망 사업관계자 100여명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PLC(Power Line Communication)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가전 사이버홈 등 홈네트워크산업의 기간망으로 PLC기술이 유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포럼에는 가전사 건설업체 기술관련업체 통신망사업자 기술표준원 등 전력선통신망 관련 산학연관 39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및 기술관리위원회로 구성, 기술관리위원회에서는 디지털가전 사이버홈 통신서비스에 관한 전력선통신기술의 표준을 검토해 운영위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포럼의 초대의장에는 한국전기연구소 김요희 박사 기술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원대 박종연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제 1 회 표준의 날 행사

'제1회 표준의날' 행사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를 산업표준(KS) 혁신을 위한 원년으로 삼

아 산업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표준제도의 세계수준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국가표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인프라인 표준에 대한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매년 10월 14일을 '국가표준의 날'로 선포, 국가표준을 2004년까지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표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 정몽구 한국표준협회회장 등 표준관련 기관 및 업계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표준화를 선도해 온 기업 및 유공자 포상과 함께 '21세기 표준정책 비전'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남북한 산업표준체제 비교' 등 표준관련 세미나가 병행해 진행됐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서는 민간기업이 제안한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채택된 MPEG-2분야의 삼성전자(주)에 대한 Global Best인정서가 수여됐으며 표준화 활동에 공헌한 중앙대학교 김준년 교수 등 8명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상 및 한국표준협회장상이 수여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동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 연간 100만불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원은 내년부터 이 행사를 국제적·전국적 행사로 확대·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프라인 표준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확산과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표준혁신체제를 구축, 우리의 표준이 세계표준시장 선점 등 국가발전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중전기기분야 수출산업으로 육성

산업자원부는 내수의존형 산업구조로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미흡한 중전기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초전도연구기반구축 등 4개 연구기반구축 및 인력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이들 사업에 9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중전기기의 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해 그동안 60억원을 투입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설비, 첨단 성능평가설비, 기술인력 양성 등에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되며 우선, '초전도 응용기술기반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진 5개국

수준의 초전도응용기술 확보에 필요한 공동연구시설을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대표적 무역역조 품목인 자동제어반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용량 전동력구동성능 평가 시스템 개발장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전기기 분야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첨단 성능평가설비 구축사업을 촉진하고 국내 전기기술인력의 교육 훈련과 함께 외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전기기술 인력에 대한 연수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ISO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전국 22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으로 2001년도 ISO 인증획득 지원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01년도 ISO 9000 규격의 전면 개정과 더욱 심화되는 해외바이어 및 모기업의 해외유명규격 인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ISO시스템구축 방법을 중소기업에게 소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ISO 900 Ver. 2000, ISO 14000, QS-9000, TL 9000 등 품질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방법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적용되는 PL(제조물 책임) 대응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소기업이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ISO 인증, 3년내 다시 받아야 한다

품질경영의 국제표준인 ISO(국제표준기구) 9000 인증 체제가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ISO 인증을 받은 국내 1만4천1백46개 업체들은 3년내에 ISO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ISO는 국제 규격을 일부 통폐합하고 인증 심사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인증 체제 개편을 단행해 기존 규격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모든 업체들에게 3년간 기존 규격을 사용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표준원은 ISO가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표준규격 ISO 9000 : 2000 패밀리 최종 규격을 확정하는데 대해 내년 1월까지 KS규격을 이에 맞춰 통폐합 또는 개정된 뒤 입안예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서울과 부산, 구미,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ISO 인증 개편에 관한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범국민 에너지절약 전국캠페인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지역 3개소 및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15개소에서 소비자보호

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3,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전국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역 광장, 고속버스터

미널, 영등포역 등 서울지역 3곳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수원, 전주, 제주 등 전국 15개소에서 16개 소비자 단체 회원과 각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등 3,900여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배포했다.

산업자원부, 전기관련 국가사무 지방 이양

산업자원부는 소관국가사무중 주민과 밀접한 현 지성이 강한 업무를 각 시·도에 대폭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전기공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전기공사업등록 등 10개 국가사무를, 전력기술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전력시설물설계업·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각 시·도에 이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이양 추진중인 국가사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공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한 때에는 신고해야 하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등록취소시 청문실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 1/4 분기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관계법령이 개정공포되어 본격 시행되게 되면 업무처리 효율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내년 2월 한전 민영화 박차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한전 노조의 파업 철회와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법률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

과로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한전의

발전부분에 대한 민영화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역별로 묶은 5개의 발전 자회사와 원자력, 수력을 합친 1개 자회사로 나눠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민영화연구기획단에서 제출한 한전

매각 방안 초안 등을 기초로 최종 정부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영화 연구기획단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팀장으로 산학연이 모여 1년 가량 한전민영화 방안을 연구했었다.

자금난 어려운 中企에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제기금운용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대출이자율을 인하하여 제2호 대출은 종전 8.0~9.5%에서 7.0~9.5%로 인하했고, 제3호 대출중 부금내 대출은 종전 9.5%에서 6.0%로 인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가계수표도 취급하는 등 대출대상을 확대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기업들은 물품대금으로 가계수표를 수취해 왔으나, 어음은 은행 등에서 할인을 통하여 현금화가 가능한데 반해 가계수표는 일부 사채나 상호신용금고에서만 현금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악화 및 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中企 4분기 중에 신용보증 9조2천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4분기중에 당초 예정인 7조7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 한 사람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을 내년 1월부터 부활시켜 투자금액의 5% 안팎을 세액공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해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

진을 문책하는 것과 함께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연말경 기업퇴출, 동절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장관 등 6개부처 경제장관들은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현안과 대응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

이날 김 대통령은 "52개 정리대상 기업은 깨끗이 정리하되, 235개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신

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를 비롯, 정리대상기업의 우량, 건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음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기업들의 자금난에 대비하고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4/4 분기중 당초 예정인 7조7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 제도를 부활키로 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은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뒤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증권사나 투신사에 주식저축계좌를 개설, 일정 한도에

서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10월 도입해 '98년 12월까지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5%의 세액공제를 해 줘 당시 11만 명이 7천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제도입으로 2조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구조조정 마무리로 약 7만5천명과 동절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실시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금융분야의 KSB 경영기술연구소 등 17개 금융자문회사를 실사기관으로 선정했다.

기간은 11월말부터 약 4주간이며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집중 실시된다.

중기청이 이번에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에서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은 신용보증기금에 축적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되도록 개발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용평가시 현재 축적된 30여만개 기업정보를 기초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